

제3장 전파조사단속 업무의 변화

전파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다. 때문에 전파관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전파이용 촉진은 물론, 전파이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책임지는 것도 역시 국가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국민의 전파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전파이용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진 전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21세기 전파행정 선도국가를 꿈꾸는 선진 전파행정을 살펴본다.

제1절 전파조사단속 활동 강화

전파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다. 전파는 소중한 국가의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전파조사단속 업무는 전파이용 질서를 흐리는 각종 불법전파설비에 대한 행위를 단속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전파이용 촉진을 통하여 전파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1. 주요 조사단속 업무 현황

가. 조사단속 대상

조사단속 업무의 대상은 ▲불법무선국 ▲허가사항 위반무선국 ▲불법정보통신기기 ▲휴대전화복제 ▲불법감청설비 등 이다.

불법무선국은 무선국을 개설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통신 서비스 등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운용한 경우를 말하는데, 전파감시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허가사항 위반무선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는 받았으나 운용과정에서 허가증에 기재된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용한 경우를 말한다.

불법정보통신기기는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정보통신기기를 말한다. 전파법에 따라 무선설비를 제작·수입하기 위해서는 형식검정이나 형식등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전자파장애기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는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파기술을 사용하는 장비와 생활가전이 증가하면서 값싼 외국산 불량기기를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와 같은 불법정보통신기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휴대전화복제 단속은 1990년대 중반 들어 이동통신이 확산되면서 더욱 중요한 단속대상이 되었다. 특히 복제행위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소가 커지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복제한 자는 물론, 복제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자와 복제에 필요한 단말기 고유번호(ESN)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도 단속에 포함된다.

불법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전국민을 몰래카메라 공포로 몰아넣었던 몇 건의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법감청은 특별단속반을 두어야 할만큼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자는 단속대상이 된다. 그러나 불법감청이 확산되면서 불법감청설비를 탐지하는 사업이 생겨났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2004년 7월 30일 이들 업체에 대한 등록업무가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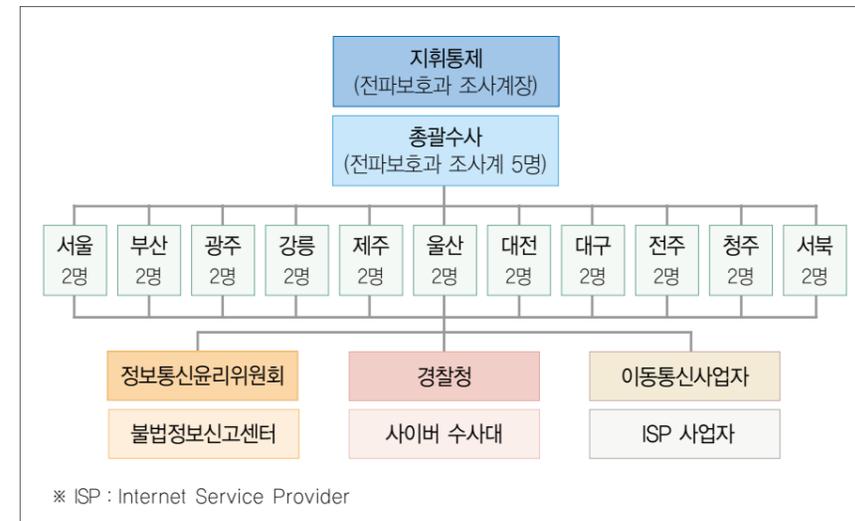


▲ 정보통신기기 인증마크

나. 단속의 현실화

1995년에는 불법전파설비에 대한 조사단속 업무에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단속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행정적인 지도 및 고발에 그쳐 구속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95년 1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년 7월부터 불법전파설비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것이다.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단속공무원은 법원의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전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불법전파설비의 증가와 지능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전파설비 단속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림 3-3-1] 사이버 수사팀 체계도



불법전파설비의 유통 확산은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공간에도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을 포함한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2005년 4월 25일 서울북부소에 '사이버수사전담팀(1팀 3명)'을 발족하였고, 2006년 3월 본소에 1팀(4명)을 추가 운영하였다. 사이버 지능화 범죄에 맞서기 위해 2007년 2월 12일 사이버 수사 전담팀을 2팀에서 12팀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이와 같은 불법전파설비 거래의 40%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등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

이버수사전담팀은 사이버공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파범죄 관련 유통정보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표 3-3-1] 불법전파설비 단속 실적 (단위: 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불법감청설비	2	33	36
휴대전화복제	13	16	11
불법정보통신기기	46	114	268
계	61	163	315

2. 불법전파설비의 최근 동향과 단속 사례

전파기술의 발전과 활용 분야의 확대에 따라 전파설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불법전파설비도 다양한 유형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불법전파설비를 이용하여 신종 사기 행각을 벌여오다 중앙전파관리소 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된 사례 및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기도박단 검거

대구분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 중인 K씨의 신고를 접수받아 2001년 3월 14일 대구시 서구 비산 7동 일대에서 몰래카메라와 아마추어무전기(모델명 C-501 주파수 432.98MHz)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벌여온 피의자 일당 6명을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계 요원과 공조 수사로 검거하였다.

이들은 불법전파설비를 도박장소인 건물 3층에 은밀하게 설치한 다음 4층에 숨어있는 일당으로 하여금 TV모니터를 통하여 본 상대방 카드를 무선으로 송신하면 귀속에 넣은 초소형 이어폰을 통하여 상대방 카드를 알아차리는 수법으로 상습사기도박을 벌여 억대의 돈을 가로채 왔다.

또한 부산, 광주, 대전 및 원주시 등에서 동일한 수법의 사기도박을 단속하여 100여 명을 검거한 사기사건이 KBS와 MBC, SBS 등 TV방송의 뉴스에 보도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사기도박단 사건이 진정되었다.

사기도박단 검거를 통하여 첨단 조사장비를 보유한 중앙전파관리소의 활동이 전파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하고,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나. 무인단속카메라 위치탐지용 불법송신기 적발

강릉분소 사법경찰관은 2001년 3월 19일 강릉시와 고성군 간 7번국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탐지용 불법송신기 단속을 벌여 관련 업자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전파송신기 8대를 최초로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전파송신기는 차안에 설치된 소형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 경찰의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사전에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만든 불법전파송신장치였다. 이후 서울과 일산 등지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적발하여 TV 뉴스와 신문에 사기사건을 보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불법 판매행위가 진정되었다.



▲ 언론 보도 내용

다. 부적합 택시미터기 사건

서울, 부산, 광주, 강릉, 제주, 대전분소 조사요원들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간 서울 등 16개 도시에서 택시미터기 제작사를 포함한 운수회사 등 178개 회사의 택시 9,297대를 대상으로 낚고 오래된 택시미터기를 무선택시미터기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택시부착 운행여부를 조사하였다.

연인원 57명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제작사는 무선택시미터기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으나, 실제로 운수회사에 유통시킨 제품들은 부적합한 제품임이 판명되었다. 또한 일부 공업사는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하다가 조사요원들에 의해 적발되었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등 엄중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라. 인증미필 자동차 원격시동장치 특별단속

그동안 자동차 원격시동장치에 대한 규정치 논란이 있었고, 전파연구소에서 다수의 합격취소 조치와 민원제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996년 7월 2일 개정된 '구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정보통신부고시 제1,996-58호)'에 따라 자동차 원격시동장치가 인증대상기기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인증미필 자동차 원격시동장치의 단속을 추진하였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용품 총판점·대리점·카센터·카인테리어숍·카용품점 등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인증합격 제품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

위, 기술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에 인증표찰만 붙여 판매하는 행위, 합격취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미인증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매장에 진열하거나 보관중인 제품 등이었다. 단속방법은 서울, 부산, 광주, 강릉, 제주, 대전, 대구, 전주 분소의 관할도시를 대상으로 자동차 관련 월간지의 광고내용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불법제품의 제작·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 단속하였다. 또한 미인증 제품의 설치를 적발하였을 때는 차량소유자와 판매자에게 즉시 철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미필제품 제작사는 의법조치하였다.

[표 3-3-2] 정보통신기기 단속 실적

구분	계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전	대구	전주
판매업체수	56	11	10	8	3	9	4	11
수 량	1,179	219	204	170	34	377	90	85

전국 36개 지역에서 연인원 262명을 투입하여 단속한 결과, 56개 판매업체에서 1,179대 64개 제작사에서 72종의 미인증 제품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제작사와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업체는 사법처리 조치하고, 기술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제작사에 반납하도록 하는 등 인증미필 제품의 유통방지에 만전을 기하였다.

마. 불법무선마이크 일제 단속

1999년 10월 11일부터 4일 간 무선마이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일제 단속이 있었다. 방송·공연용 및 대중방송설비용 무선마이크의 판매와 유통상 문제가 되는 제작자·수입자·판매자 및 설비업체를 중점적인 단속 사항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1999년 6월 4일 개정된 '무선마이크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적 조건(정보통신부고시 제1,999-46호)' 개정에 따라 새로운 기술기준에 의한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불량기기 확산 방지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연인원 128명이 참여한 일제 단속에서 8개 업체로부터 형식등록 미필기기 132대를 적발하였다. 이중 국산기기는 2개 업체 21대이고 나머지 6개 업체 111대는 외국에서 수입한 무선마이크였으며, 단속과정에서 2,436대의 무선마이크는 형식등록 표장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단속요원에게 적발되었다.

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형식등록 미필기기를 제조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였고, 표장 미부착기기를 제조한 업체는 전파연구소에 행정조치 의뢰를 단행하여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3. 불법정보통신기기의 유통 방지

전파법 제46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제작·수입·유통하는 자는 형식검정과 형식등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불법정보통신기기를 추방함으로써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기기는 선박·항공기 등의 인명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기로 정보자동수신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형식등록을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기기는 일반인이 쉽게 쓸 수 있는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파법 제57조에 따라 전자파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수입·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기기는 데이터·통신메시지의 입력·출력·저장·검색·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요 기능과 정보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포트를 갖춘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구성품 및 무선통신 단말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전파환경 변화에 따라 PDA나 PC 등 정보통신기기에 접속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랜, RFID용 무선기기, 영상전송기기, 도난경보기 및 완구형 무선기기류 등 유무선 통합제품과 방송·통신 융합기기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선통관 후인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소규모 수입업체가 인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인증을 거치지 않은 불법정보통신기기를 유통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영세 판매업체는 인증을 받지 않은 디지털카메라 등을 보따리상으로부터 소량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의 유통구조에서 온라인판매의 비중이 커지는 등 판매 방법이 날로 변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불법정보통신기기 가운데 사법경찰관의 단속을 통하여 지금은 자취를 감춘 불법전자댄스게임기(DDR)가 있다. 2000년 중앙전파관리소 사법경찰관은 전자댄스게임기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서 30여 곳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법전자댄스게임기 1만 여점을 적발하고, 중간유통업자 등 3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당시 젊은 층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전자댄스게임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단속 사실은 KBS TV가 2000년 1월 20일 정규 뉴스를 통하여 보도하였다. 이후 SBS 뉴스를 통하여 불법전자댄스게임기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는 보도가 방송되면서 이들 불법전자댄스게임기들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4. 휴대전화복제 및 불법감청설비 단속

가. 휴대전화복제 단속

불법복제한 휴대전화의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95년 8월 25일부터 한달 간 일제단속을 벌여 판매상 250곳과 가입자 128명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큰 성과는 올리지 못하였는데, 이는 언론에서 특별단속에 대한 일정이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복제기술자들이 잠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부여된 직후의 단속이라 조사공무원의 익숙지 않은 업무 수행으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 단계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벗어나 날로 증가하는 휴대전화복제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수시단속을 병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 휴대전화 복제 현장 및 중고 휴대전화

일제단속기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사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한국이동통신(현 SKT) 본사와 협력하였는데, 한국이동통신이 복제자 추적과 증거 확보 요령에 대한 교육방안을 만들고 이를 한국이동통신 지방지사에서 중앙전파관리소 산하 분소를 방문하여 교육하였다. 교육 내용은 휴대전화복제 단속자료, 휴대전화 HEXA ESN 복제 실태, 복제 유형별 실태 및 복제 가입자 현황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함께 연중 1회 불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모든 단속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단속방법 역시 한국이동통신의 불법통화 검색자료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검사장, 휴대전화 판매상 및 A/S센터에서 고장수리시 복제여부 확인, 민원인에 의한 신고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휴대전화복제 사용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불러일으키고 재산피해 등 사회 문제가 되었다. 특히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서 광고를 보고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상호연락하여 복제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자의 IP 주소를 추적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에 대한 대책도 세워나가고 있다.

나. 불법감청설비 유통단속

불법감청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국민들의 불법감청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불법감청설비 단속반을 구성하여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불법감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감청설비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발견일시·장소 및 내용 등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실명제로 신고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감청설비 유형으로는 전화기형·대화형 및 위장형 등이 있으며, 전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유선방식에서 고성능의 소형 무선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적발된 경우는 불법감청설비를 외국 인터넷사이트나 외국여행자 등을 통하여 반입한 경우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 후 이를 재판매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타인의 통화나 동영상 도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다 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등이다.

불법감청설비를 유통한 위반자의 직업을 보면 자영업이 가장 많고, 회사원, 수입상 및 심부름센터 종사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개인이나 수입상은 외국 여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량을 구입하여 인터넷과 전자상가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매자는 회사원·은행원 및 주부 등으로 영업비밀탐지 또는 배우자의 불륜이나 이혼소송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초소형카메라를 내장하고 무선으로 원격조정이 가능한 불법감청설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항공·선박·국제특급우편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기기로 위장·밀수입하고 있으며, 모방된 국내 제작 제품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표적인 불법감청장비의 송수신기

5. 단속현장의 상주근무제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감청설비 및 불법정보통신기기가 합법적인 정보통신기기로 위장·통관되어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선통관 후인증 제도를 악용하여 수입 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외국산 불법정보통신기기의 유통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속 방법과 병행하여 공항이나 항만의 세관, 국제우체국, 대형전자유통상가 등에 단속요원을 상주시켜 불법전파설비의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속현장 상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 주요 임무와 기대효과



▲ 관세청 직원에 대한 불법감청설비 식별 교육

상주근무제는 2006년 2월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2006년 6월 전담요원 및 예산 확보를 마치면서 200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단속요원은 공항·국제우체국의 통관검색대에서 외국여행자의 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X-Ray선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용의제품 발견시 증거를 확보하고 반입자에 대한 신변확보 및 국제우편물 수신자의 주소지와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전자유통상가에서 상주하는 단속요원은 인증미필기기를 공급하는 도매상, 수입상의 거래처, 유통조직, 제품 보관창고 등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단속요원들의 임무를 통하여 불법감청설비 등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국민의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인증미필기기를 수입·판매하는 조직의 중점 단속으로 전국에 유통확산을 방지하여 소비자 및 관련 산업체를 보호하는 기대효과를 얻고 있다.

나. 시범운영 및 사전 준비 활동

상주근무제 단속요원들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존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 2회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1차 시범운영은 2006년 3월 인천공항, 김포공항, 서울국제우편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 김해공항 등에서 실시하였다. 수도권지역 전담요원은 본소 전과관리과 조사계 및 서울분실 인력을 자체 조정·투입하였는데, 서울·인천세관에는 본소 직원 2명을 지정하고 용산전자상가, 남대문수입상가, 세운상가, 테크노마트에는 서울분실 직원 2명을 사법경찰관(리)로 추가 지명하여 지정하였다. 부산지역에 투입된 부산세관 전담요원은 본소 직원 1명과 부산분소 조사과 단속인력 2명을 자체 조정하여 활용하였다.

2차 시범운영은 인천·부산항에서 2006년 4월 실시하였으며, 3차 시범운영은 2006년 5월 용산전자상가 등지의 대형 전자유통상가에서 실시하였다. 아울러 남대문 소재 서울분실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여 서울지역 상주근무제 요원들의 현장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부산지역 현장사무실은 경남 양산시 소재 국제우체국 내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키로 합의하였다.

그밖에 인천지역 현장사무실은 인천공항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의 2007년 7월 개설에 맞추어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와 임대예산 확보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상주근무제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담요원의 배치 및 확보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총원을 10명으로 증원하고 단속요원 2명을 1팀으로 구성했으며, 세관통관 검색대에 3팀, 수도권 대형 유통상가에 2팀을 상주시켰다.

세관통관 검색대의 경우 인천공항·인천항 여객부두 1팀, 서울국제우편세관·김포공항 1팀, 부산국제우편세관·김해공항·부산항 여객부두 1팀을 상주시켰으며, 수도권 대형 전자유통상가는 용산전자상가·남대문수입상가 1팀 및 세운상가·테크노마트 1팀을 상주시켰다. 이와 함께 향후 전과감시기도화사업

구축 완료 등 설비자동화에 따른 인력재배치시 연차적으로 증원 배치할 예정이다.

2006년 12월 30일 중앙전파관리소 본소의 직제개편(정보통신부 훈령 제28호)에 따라 전파관리과 조사계의 업무를 현재 신설 전파보호과 조사계에서 수행하고 있다.

6. 클린스토어 지정·관리

정보통신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중앙전파관리소는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때문에 조사요원들이 판매업소를 수시로 방문함에 따라 판매업소에서 영업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 클린스토어제도의 도입

조사요원의 판매업소 방문에 따른 영업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하여 2005년 4월 25일 '클린스토어 제도 운영 계획(감시1과-1172)'을 마련하였다.

클린스토어 제도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업소에 대하여 지정·관리하는 제도로서 일정기간 단속을 유보하여 업소의 영업활동상 불편을 줄여주는 한편, 불법정보통신기기 판매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클린스토어제도 마련을 위해 유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청, 대전시청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여 제도시행 근거규정 및 관련지침, 업소지정·관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고 포상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도 검토하였다.

우수기관 시행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2005년 3월 말 클린스토어 지정·관리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2005년 4월 최종 운영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매년 말 지역별로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우수지정업소를 선정하고 표창·포상을 실시하기로 하여, 2005년 12월 중 10개 업소에 대한 선정을 마쳤고, 2006년 3월에는 우수업소 포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 활성화를 위한 사전작업



▲ 클린스토어 스티커

클린스토어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도 마련되어,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통보 및 간담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클린스토어 신청·접수를 지원하였다.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도 제도 홍보 및 신청·접수 페이지를 열어놓았다.

또한 클린스토어 지정업소를 대외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클린스토어 표시스티커를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공모하였는데, 선정된 우수상품작을 기초로 우정사업본부 우표디자인실에 스티커도안 제작협조 요청 후 클린스토어 스티커 10,000부를 제작 2005년 9월 배포하였다.

다. 효율성을 감안한 운영지침 개정

2005년 4월 클린스토어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클린스토어 지정·관리 운영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업소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바 있는데, 지침 마련 이후 클린스토어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운영상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일부 내용에 대해 개정하여 2006년 2월 1일부터 개정된 클린스토어 지정·관리 운영지침(전파관리과-254, 2006.01.31.)을 시행하게 되었다. 변경된 운영지침 가운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서울, 부산, 서울북분소를 대상으로 하던 선정지역을 확대하여 광역시 지역의 광주, 울산, 대전, 대구분소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클린스토어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하던 분소별 클린스토어제도 추진위원회를 폐지하여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밖에 지정기준도 엄격하게 개정되었는데, '최근 1년 간 전파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지 않은 업소'로 되어 있던 지정기준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최근 1년 간 전파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업소'로 강화하였다.



▲ 정보통신기기 판매업체에 대한 클린스토어 시행

제2절 '전파지킴이' CS기동팀 발족

오늘날 전파는 단순히 통신매체 뿐만 아니라 정보획득의 수단이자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매체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의 전파통신 분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규제를 완화하고 전파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른 어떤 분야보다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전체 산업에서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 초창기 로고가 붙은 이동방향탐지시스템과 서울분소 CS기동팀

하지만, 전파기술의 활용 분야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무선통신의 혼신 또는 지리적인 이유에 의한 라디오·TV의 수신장애가 대부분 이었다면, 최근에는 전파기술을 사용하는 상호 기기의 혼신 및 전파기술을 불법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전파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전파관련 민원 서비스는 혼신만 제거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조금도 불편없이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CS기동팀'이 발족되어 24시간 민원 접수를 시행하고 전직원에 대한 과감한 의식개혁을 단행하는 등 세계 초일류 전파행정 서비스 구현에 나서게 되었다.

▶▶▶ 수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협력하여 풀다!

이 은 정 | 대전전파관리소 전파조사과



2007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무궁화2호 위성이 보내오는 정보를 실은 주파수 인근에 불요파가 유입되어 위성위치 자동추적에 장애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우리 CS기동팀은 눈보라 속에서도 혼신 원인을 찾기 위하여 즉시 출동하였다. 고층건물 옥상에 올라가 측정기로 불요파 신호가 가장 세게 나오는 방향으로 찾아가 보면 신호가 사라지고 없었다. 포기하지 않고 천안 성거산, 서산 원효봉 정상에까지 올라가 측정을 거듭해 보았으나 혼신을 주는 신호는 세졌다 약해졌다,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였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위성전파감시센터와 전국의 지방전파관리소에 혼신신호 측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소에서 혼신파를 측정하였으나 신호의 유입 방향과 세기는 측정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왔다.

풀릴 듯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이 혼신은 이렇게 우리 대전전파관리소 전파조사과 모든 직원들에게 큰 숙제로 다가왔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신원은 상공을 이동하는 비행체로 추정된다고 본소 전파보호과에 중간보고를 했다. 잠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긴급히 출장 내려 온 본소 전파보호과 전

파환경계 조사팀과 합동으로 기존에 측정된 혼신신호와 합동참모본부에서 입수한 군 승인주파수 리스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혼신원은 공군 전투기의 속도, 고도 등의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발사하는 데이터 신호란 것을 확실하게 되었다.

우리 팀은 공군의 협조를 얻어 제29전투비행단 ACM(공중기동체계) 통제실과 부안, 서산 사이트 등에서 모의신호를 발사한 결과 우리의 판단이 맞았음을 확인하였다. 상황을 정리해 보니 공군에서 사용 중인 주파수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허가받아 쓰는 주파수가 대역이 비슷하여, 연구원의 위성안테나가 위성신호보다 강하게 발사되는 전투기 신호 방향으로 자동 지향하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측정결과를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성과의 교신을 하는 장비에 해당 주파수만 걸러주는 필터를

부착, 사용함으로써 한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혼신 민원이 종결되었다.

이번 혼신 건을 처리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 전파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방탐을 수십 차례 반복하는 과정에서 신호(주파수)를 판독하는 시야가 넓어졌다. 언뜻 보면 하나인 신호(전파 스펙트럼)에 두 개의 파형이 있는 걸 알고서야 혼신원을 찾을 수 있었던 이번 일을 계기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또 혼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전파관리소와 위성전파감시센터 그리고 본소 전파보호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진한 동료애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드러나지 않게 기간통신망을 보호하는 우리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상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시 한번 도움 주신 여러분과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 전파관리서비스의 전방위 개혁



CS기동팀의 CS는 'Customer's Satisfaction(고객 만족)'의 약자로, 무선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전파장애를 받고 있는 이용자가 곧 고객이라는 인식하에 붙여진 명칭이다. CS기동팀의 역할과 의의는 '전파의 교통경찰', '전파소방관', '전파의 파수꾼'이라는 CS기동팀의 별명으로 잘 파악할 수 있다.



CS기동팀은 ▲민원접수 즉시출동 ▲명확한 원인규명 ▲완벽한 민원해소라는 3대 활동목표를 정하여 서울, 부산, 광주, 강릉, 제주,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 16개 팀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CS기동팀은 단순히 이동방향탐지차량을 통한 즉시출동 서비스를 의미하지 않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CS기동팀의 발족과 함께 혼신조사·제거라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방위 개혁을 시작하였다.

CS기동팀은 발족과 함께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로고를 제정하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수신자부담 전파민원 전용전화(080-700-0074)를 설치하였다.

2000년에는 도착시각 예고제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했는데, 민원 처리에 앞서 도착시간을 사전에 민원인에게 공지해 줌으로써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03년에는 민원인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도착시간 맞춤제를 시행하여 서비스의 모든 과정이 민원인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CS기동팀의 3대 목표를 ▲신속한 장애해소 ▲명확한 원인규명 ▲완벽한 민원해소로 일부 수정하게 되었다.

CS기동팀은 이동방향탐지기 등 조사장비를 탑재한 차량 1대에 운전원을 포함한 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초기 16개팀 48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19개팀 57명이 활동 중이다.

[표 3-3-3] CS기동팀의 연도별 지역별 구성 현황

	계	서울	부산	광주	강릉	제주	대전	대구	전주	청주	서울북	비고
1999년	16	3	2	2	2	1	2	2	2	-	-	
2000년	18	3	2	2	2	1	2	2	2	2	-	청주분소 개소
2002년~현재	19	2	2	2	2	1	2	2	2	2	2	서울북분소 개소

2. 고객만족도 99% 달성

CS기동팀은 무선국의 혼신 또는 TV방송 수신장애 등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모든 불편사항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 전파환경 수탁측정은 물론, 경호·군·경찰·소방통신 등 국가 중요통신망의 전파장애를 예방하여 원활한 통신소통을 지원해 주며, 중요통신망이 밀집된 지역은 혼신취약 대상으로 관리하여 전파환경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2 월드컵, 부산아시아게임,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국가 주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였고, 산간·오지 등 전파이용 소외지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를 펼쳤다.

직접적인 전파민원 서비스 외에 국민의 전파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2000년을 시작으로 전파이용자 및 시설자를 대상으로 전파자원의 중요성과 올바른 전파이용 등을 홍보하기 위한 CM2000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활동은 특히 CS기동팀의 활동사항을 안내하여 전파장애를 겪는 국민들이 전파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CM2000은 중앙전파관리소와 지방관서가 모두 참여하였는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적으로 도심지역과 정보통신기기 판매 전문상가를 대상으로 78개소 연인원 436명을 동원하여 출·퇴근 시간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전단을 배포하였다. 홍보전단에는 전파법 개정사항과 올바른 전파이용, 정보통신 인증규칙은 물론 CS기동팀 이용안내까지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은 '고객 만족'으로 나타났다. 중앙전파관리소는 CS기동팀 발족과 함께 전파민원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CS기동팀의 활동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민원처리가 완료된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설문지와 반송봉투를 배부 이를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 정보통신기기 판매 전문상가에서 CM2000 홍보 활동

[표 3-3-4] 연도별 CS기동팀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건)	응답(건)	응답률(%)	만족도(점)
1999년	376	122	32.4	95.1
2000년	361	114	31.6	95.0
2001년	333	81	24.3	97.8
2002년	470	131	27.9	98.0
2003년	512	149	29.1	98.8
2004년	544	345	63.4	99.4
2005년	213	81	38.0	99.5
2006년	277	100	36.1	84.0

설문 내용은 민원 종류, 민원 신고방법, 홍보효과(연락처 인지방법), 기타 민원과 관련한 의견 및 8개의 고객만족도(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민원 신청절차, 야간·휴일 업무처리, 출동시간, 현장조사, 문제점 해소, 처리의 신속성 및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했다.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만족도(50점)와 요소별 만족도(50점)를 배점하되, 만족도별 점수를 차등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CS기동팀 발족 첫 해인 1999년 95.1점을 보이던 고객 만족도는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상승곡선을 그려 2005년에는 99.5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2006년도에는 모든 민원을 전파이용CS센터에서 관리하면서부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접수되는 불법전파설비 제보·신고에 대해서도 설문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존 설문방식이 아닌 전화로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함에 따라 만족도가 84.0점으로 낮아졌다.

3.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서비스 역량 강화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친절교육

CS기동팀의 고객만족 서비스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까지 조사요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기존의 전파기술과 장애처리 중심의 기술에서 벗어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첫 번째 친절교육은 2002년 강릉분소 회의실에서 실시됐는데,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유영순 교관과 중앙전파관리소 감시1과 김홍식 조사계장이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의 실천의지 확립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요통신망 지원활동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친절교육에 대한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2003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였다. 한서대학교 관광학과장 김민수 교수를 초빙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사요원들의 기본예절 및 행동 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예절, 대화 및 표현기법,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서비스 및 불만 사례, 팀 활동을 통한 시연과 발표 등을 통하여 조사요원들의 대국민 서비스 정신 함양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대구 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반 정보 및 지원활동사항 등을 교육하여 대형 국제대회에 임하는 조사요원의 자세를 가다듬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전파기술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4년에는 대전분소에서 새롭게 서비스되는 DTV, DMB, DVB-H와 TV수신장애조사, 전파장애조사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4. CS기동팀 방향탐지경진대회

CS기동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능력은 곧 방향탐지 및 전파추적·색출 능력이다. 이는 신속한 혼신원 및 불법무선국 발견·제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CS기동팀의 전파민원처리 역량과 민원처리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CS기동팀의 방향탐지 및 전파추적·색출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CS기동팀의 방향탐지경진대회는 각 CS기동팀 간의 경합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각 팀에 업무역량 강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주요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995년부터 CS기동팀이 출범하기 직전인 1998년까지 신규발령 및 전입자 등 기량 미숙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 성격의 현장교육인 '전파혼신원 추적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방향탐지의 원리와 장비운용법, 신호추적과 색출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훈련은 1999년 CS기동팀이 발족되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일반감시국소를 대상으로 기량을 겨루는 '이동방향탐지 지휘·



▲ 휴대용 방향탐지기를 이용해 혼신원을 탐색하고 있는 경진대회 참가자

왕초보의 휴대 방탐 경진대회 참가기

황 인 민 |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조사과



2006년 9월 본소에서 주관하는 CS기동팀 이동 방탐 경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충주에 갔다. 특이하게도 충주시가지의 가로수는 탐스러운 사과나무였다.

나를 유혹하는 사과의 매혹적인 눈빛을 뒤로 하고 도착한 곳은 첫 집결지인 충주역이었다. 대합실에 들어서니 전국 11개 지역에서 모인 CS기동팀원과 진행요원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모두들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서로들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일부 팀원들은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대부분은 대회 목적이 CS기동팀의 신속한 전파민원 해결을 위해 실력을 견주어보는 대회인만큼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3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본격적인 휴대 방탐 대회를 시작했다. 제1경기는 임충민공 총렬사 인근 공터였다. 처음으로 출전하는 대회라서 그런지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두근두근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약 8kg정도 되는 휴대 방탐기를 어깨에 메고 한참을 달리자 어깨도 아프고 숨이 목까지 차 올랐다. 또한 낯선 장비를 메고 군대 훈련하는 듯이 열심히 뛰는 우리 모습을 보고 거리를 지나가던 주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열심히 신호를 찾아 골목길을 헤맸으나 막다른 길에서 헤매는 바람에 성적은 좋지 않았다.

분발을 다짐하며 2경기가 열리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로 이동하였다. 방탐 장소가 대학교정이라 높은 건물이 많아 반사파를 감안해서 방탐을 해야 했다. 신호를 추적하다 보니 학교 경계 부분과 야산이 맞닿은 작은 골짜기에서 신호가 나오는 것을 포착했다. 그러나 기쁜 마음도 잠시뿐 의외로 쉽게 표적지를 발견할 수 없었고 골짜기 주변만 맴돌 뿐이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 멀리에서 온 신호가 건물과 야산 때문에 반사되었고 어쩌면 그 반사파를 내가 추적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인근에 있는 운동장으로 나와서 다시 목표물 추적을 시작했다.

신호가 나오는 방향을 다시 포착한 곳은 조금 전에 헤맸던 곳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신호가 건물과 야산 사이에서 반사되어 반사파가 생겼던 것이다. 아무튼 표적지를 찾아 출발점을 향해 무거운 장비를 메고 정신없이 달렸다. 딸아이가 '아빠, 힘내!' 하고 응원하는 환성이 들리는 듯 했다. 그러나 한참을 헤맨 끝에 2경기 성적도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한 내게는 5~6시간 정도 걸린 휴대 방탐 경기 내내 긴장되고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신속하고 명확한 혼신 해결을 위한 CS기동팀원으로서의 역량 배양은 물론 전국 각지의 동료들과 우정을 맺는 기회가 되었음에 가슴 뿌듯했다.

통제 경진대회'로 발전하였다. 이 대회는 지휘차량(Master)에서 방향탐지차량(Slave)을 제어하여 산출된 결과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였으며, 휴대용 방향탐지기를 이용한 PRDF(Professional Radio Direction Finding) 대회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동방향탐지 지휘·통제 경진대회'는 2003년부터 현재의 '기동방향탐지 경진대회'로 발전하였다. 방향탐지차량 1대가 활동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삼각 방향탐지에서 단독방향탐지 형태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조사요원 1명만 참가했던 제주분소를 타 분소와 동일하게 인원배정하고, 각 분소 운전원을 1명씩 참가시켜 공정성을 높였다.



▲ 2005년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주분소

[표 3-3-5] 연도별 방향탐지 경진대회 실적

차 수	기 간	장 소	우승팀
1회	1999. 10. 11.~10. 15.	충북 충주	부산, 전주
2회	2000. 09. 25.~09. 29.	강원도 강릉	대전
3회	2001. 09. 10.~09. 14.	전북 남원	대전
4회	2002. 09. 09.~09. 13.	경북 경주	서울
5회	2003. 09. 24.~09. 27.	충남 논산	대전
6회	2004. 09. 16.~09. 18.	경남 밀양	대전
7회	2005. 10. 19.~10. 21.	전남 나주	광주
8회	2006. 09. 28.~09. 29.	충북 충주	제주

5. 전파민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

CS기동팀이 창설된 이후 전파관련 민원 사례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 역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며, 정부기관 내에서도 전문적인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파 관련 민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정리하여 타 부처 전입자 및 신규직원에게 대한 교육은 물론,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전파 이용 효율 촉진을 기여할 목적으로 전파민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첫 번째 사례집인 '전파환경 지킴이(전파장애 신고안내 및 해결 사례집)'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각 분소 송치사건과 행정처분 사례, 시사적이며 독자성을



▲ 전파관리 50년사(1999년)

작된 우리나라 전파관리는 1949년 11월 22일 서울, 부산, 광주 전파감시국의 설치와 더불어 본격적인 전파관리 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1983년 12월 30일 중앙전파감시소로 승격에 이어, 1987년 12월 15일 중앙전파관리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전파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파관리는 수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초기에 특정 분야에 한정적으로 이용되던 전파가 오늘날에는 국민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전파 없는 세상을 생각하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조직의 변화와 업무영역의 확대 등 기본임을 수행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중앙전파관리소는 그간의 변화를 기록한 자료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전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50년에 이르는 전파관리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향후 조직의 발전 과정에서 과거의 사례를 반추해 볼만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1997년 중앙전파관리소는 그간의 전파관리 역사를 정리한 '전파관리 50년사'의 발간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미 50년이나 지난 과거의 전파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2년여에 걸친 자료수집과 자료에 대한 증빙, 그리고 이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 1999년 12월 마침내 '전파관리 50년사'를 발간할 수 있었다.

전파관리 50년사는 우리나라 전파관리의 역사를 초창기, 성장기, 도약기의 3단계로 나누어 각 시대의 전파관리 상황과 전파관리 조직의 변화를 주요 이슈별로 정리하였다. 특히 전파감시 업무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시기의 전파감시 상황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어 전파관리

역사의 중요한 사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대별 전파관리 장비와 시설을 영상으로 정리하여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 12월 28일 중앙전파관리소 대회의장에서 정보통신부 안병엽 차관과 전파 관련 원로, 관계직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파관리 50년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 전파관리 분야 원로들이 대거 참석한 전파관리 50년사 출판기념회

▶ ▶ ▶ 수기

전파관리 역사의 현장을 추억하며

이 용 균 |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한국의 전파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역사 편찬을 위한 '전파관리 50년사' 편찬 전담반으로 활동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작년부터 전파관리50년사 이후의 10년간의 역사 편찬 전담반원으로 다시 활동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모아 전파조사업무 분야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였다.

특히 전파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의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 지난번 전파관리 50년사에 수록하기 못한 역사적 고증자료를 다시 펼쳐 보면서 한 줄이라도 더 쓰고 싶은 생각으로 집필에 임하였지만 바쁜 업무관계로 아쉬움도 많았다.

1947년 6월 1일 전파감시업무 시발 이후 전파조사업무 분야의 기틀은 1973년 9월 4일 전파관리국의 혼신조사업무지침이 마련되어 무선설비에 의한 혼신조사업무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1976년 8월 21일 전파관리국의 전파감시업무처리지침, 1980년 7월 21일 전파관리국 기술과의 전파감시국 주변의 전파잡음조사계획, 1981년 2월 12일 전파관리국의 방향탐지운용지침, 1983년 12월 26일 전파관리국의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위규처리지침이 제정되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전파관리업무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의 전파분야 발전에 따라 중국의 전파에 의한 국제혼신 발생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그러나 1947년 6월 전파감시국 설립 이후 2003년까지 56년여 동안 중국(중공)과는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전파분야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행히도 2002년 12월 중순, 중국 신식산업부 대표단의

한국 방문 소식을 접하고 서울 신라호텔에 머물고 있는 중국 대표단을 만나 중국의 무선전파관리국의 전파감시부서의 연락처를 요청하였다. 이후 중국 측에서 회신을 보내오기에 따라 본격적으로 중국과 교류협력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이후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산업부 간의 전파감시분야 협력협약서(안)이 수차례 걸친 협의 끝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2003년 10월 15일 당시 중앙전파관리소 감시과 주중옥 과장을 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과 중국 신식산업부 무선전파관리국 자이페이보 부국장을 대표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중국에서 최초로 만나 한·중 회의를 열리게 되었다. 한·중 회의의 목적은 2003년 11월 말에 한국의 정보통신부 유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장과 중국의 신식산업부 유리화 무선전파관리국장 간의 협력회의의 행정 회의록 체결을 앞두고 전파감시분야의 최종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확정하기 위함이었다.

2003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유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장과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산업부 유리화 무선전파관리국장 간의 역사적인 한·중 협력회의의 행정회의록에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파감시소 현황을 파악하는 기회를 얻게 됨은 물론, 전파분야의 한·중 교류협력이 급속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뒤이어 일본과도 교류협력을 맺어 한·중·일 동북아의 전파관리분야 새로운 서막을 열게 되었다.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미래에는 광대역통합망, u-센서네트워크 기반의 현실생활을 지원해주는 생활밀착형 유·무선 서비스 구현 시대가 도래한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맞춰 전파관리분야도 지속적 발전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나의 30여년에 이르는 전파인으로서의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